

간호사 업무부담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촉구

간협, 국회 토론회 참석 ...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 우선돼야

“간호사에게만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호사 법정인력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

시행 8년째를 맞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주기가 평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대로는 안된다!” 토론회가 4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중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 전국보건 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 측 토론자로 나선 조순연 경남간호사회 제1부회장은 “의료기관은 평가인증에 앞서 간호사 법정인력 배치를 준수하고, 간호사가 병동에서 간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암기 위주의 평가방식과 다른 직종의 인증준비 뭉개기 떠맡겨 되는 시스템은



간호사 업무부담 가중시키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개선 촉구 토론회 모습

로 인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보여주지 않는 인증준비를 지양하고 실제 지속 가능한 병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평가에서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지표, 문서작업으로만 남게 되는 무의미한 지표, 간호사에게만 준비부담이 떠넘겨지는 지표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병원 등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증센터 강화책을 마련하고, 평가지표에 의료기관 근무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이 대로는 안된다?” 주제로 발표한 나영명 보건 의료노조 정책국장

은 “평가인증제가 보여주지 않는 일회성 반쪽평가에 그쳐 오히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물품과 환경정리 등에 치중하는 평가방식, 외유기 중심의 평가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인증 지표에 적정인력 준수 여부를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장은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제도운영 혁신을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면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국민에게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 경영정상화”

건강보험공단 경영방침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하고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나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사장 경영방침과 2018년 건보공단 운영방향을 4월 2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일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세달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한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요구돼 왔다.

이에 이사장과 전 직원이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며,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정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자 한 것이다.

경영방침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 슬로건 아래 ‘국민중

심’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공단으로 새롭게 변신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조직문화를 혁신해 전문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한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의 조직’을 내세웠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보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이사장 경영방침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핵심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국가트라우마센터 개소 ... 재난 심리지원 체계 구축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 국민들의 재난 트라우마를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4월 5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장은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겸임한다.

지난 2014년 세월호사고 이후 중증호흡기중증군(메르스), 경주·포항 지진 등 대형사고 수습과정에서 재난 심리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이 강조돼 왔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포함되면서 빠르게 진척됐다.

지금까지 대형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은 2013년 5월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발족된 심리위기지원단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심리위기지원단은 비상설 조직으로 중앙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별로 재난 위기대응 및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 BI(브랜드 아이덴티티)

특히 올해 재난 유형별 활동지침, 심층사정 평가도구 등을 개발하고, 재난현장에서 양질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이동버스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2020년까지 국립정신병원(공주·나주·춘천·부곡)에 권역별 센터를 설치해 전국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사명감 고취를 도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와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 분야와 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분야로 나뉘어 실시한다.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

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 상급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 상급 50만원 등 총 27명에게 상금 860만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91, 3692)에게 문의. 주혜진 기자 hjjoo@

결핵 신환자 전년 대비 9.0% 감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7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결핵 신환자는 2만 8161명으로 전년 3만 892명에 비해 9.0% 감소했다. 2000년 이후 최저치 이후 6년 연속 감소했으며, 2만명대로 첫 진입했다.

결핵 신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했다. 특히 20~29세 젊은 층에서 전년 대비 20.0% 정도 크게 감소했다. 전체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2%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전년보다 2%p 증가한 수치다. 또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중 노인층의 비율이 8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전년 대비 23.1%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결핵관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후세대로의 질병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의 결핵퇴치 정책을 두텁게 하는 동시에 그동안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등 결핵에 취약한 사각지대까지 보다 촘촘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022년까지 결핵발생을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77명에서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혜진 기자 hjjoo@

저출산 대책, 여성의 건강과 삶 중심으로 재설계

복지부 등 저출산 관련 부처에 개선 권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건강과 삶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전면 재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 특별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9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건강관리를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일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낳아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재생산 건강권은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 강제·차별·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적 속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또한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별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장에 담았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해외 관련 결제시 20,000원 캐시백!

Nurselife
대한간호협회 후원사업자 | Nurselife 닷스라이프 | www.nurselife.or.kr | ☎ 1566-3137

간호사 면허신고 안내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구분	해당사유	증빙서류	비고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 간호대학 대학원 재학생	당해연도 성적증명서	
	■ 신규 면허 취득자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자 -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자 * - 군복무자 *	성적증명서 임신확인서 병적증명서	*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자 및 군복무자는 2018.1.1.부터 면제자로 적용함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휴직자 - 퇴직 및 미취업자 - 교수 및 연구원 - 일반·행정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노조전임자 - 해외체류자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직무기술서 발령확인서 출입국사실확인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복무자 * - 입원 또는 질병휴직자	병적증명서 진단서	* 군복무자는 2017년까지 유예에 해당함

자세한 사항은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 lic.kna.or.kr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koreanurse.or.kr)에서 바로가기 클릭

면허신고센터

☎ 1644-1755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초빙 공고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한 프로그램평가인증 정부인정기관으로서, 정부 위탁사업인 ‘간호교육인증평가’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등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문성과 지도력을 갖춘 분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공모 직위 및 임기 등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1명 - 임 기:2년
- 근무조건: 비상근으로 주 3일 이상 근무

■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 간호학 전공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
- 평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자
- *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활동 경력, 대학자체평가, 대학기관인증평가, 대학구조 개혁 평가, 국고지원사업 등 평가 관련 활동 경력 등
- 조직 관리를 위한 행정 및 경영 능력을 가진 자
- * 대학 행정(보직 등) 경력, 협회, 학회 등 전문지 단체 경력 등
- 평가원 운영의 비전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자
- 국가시험(면허/자격) 관련 경력을 가진 자 유예

■ 전형방법 및 절차

-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정추천단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원장추천단의 심의, 추천 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

■ 제출서류

- 원장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평가원 발전계획서 1부
- 관련 증명서 각 1부(지원서에 기재된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명자료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일체
- * 제출서류 양식: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 기한, 방법 등

- 제출기한: 2018년 4월 2일(월)~2018년 4월 16일(월) 18:00까지
- 제출방법: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및 우편접수에 한함
-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우) 04613, Tel : 070-4626-2315, email : kabone@kabone.or.kr
- * 방문 및 우편접수를 통한 제출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공고 결과 기한 내에 응시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인재 채용을 위하여 연장 공고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운영지원팀 인사담당자 Tel : 070-4626-2315)